

李, 보수 텃밭서 ‘국민통합’ vs 金, 수도권서 ‘尹 계엄’ 사과

이재명, TK·PK 중심도시 유세
독립운동 본고장 안동서 ‘보훈공약’

김문수, 수도권 유세 강행군 일정
전광훈 목사 통한尹 지지선언에도
12·3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를 찾아 ‘국민통합’을 외치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수도권을 집중 공략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과하며 유권자를 설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본투표를 이틀 남긴 1일 TK와 PK의 중심 도시인 경북 안동, 대구, 울산, 부산에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유세하는 일정을 짰다. 이후 보는 자신의 고향인 안동에서 해군 초계기 사고로 순직한 장병 4명의 명복을 빌고 정부에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이 후보는 안동이 독립운동의 본고장이라며 ‘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보훈공약은 ▲사각지대 없는 보훈 의료 체계 구축 ▲보훈 급여와 수당 체계 재정립 ▲국가보훈위원회 위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근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서 “계엄, 많은 어려움을 우리나라에 끼쳤다. 탄핵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다”며 “여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서울 강남구 유세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하며 청중들을 향해 사과의 큰 절을 올렸다. 그는 “앞으로는 계엄이나 탄핵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다. 특히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직·구직을 시도하지 못한 청년들이 50만 명 이상이다.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장사도 잘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장관 출신인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의 발목 잡는 법은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노란봉투법 만든다는 데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나”라며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면 우리 청년들은 어디서 취업하고 일자리를 구하냐”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과 기능 정상화 및 독립기념관 등 보훈 공공기관 임원 대표성과 역사성 고려해 임명 등이다.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을수록 진영 결집이 단단해지는 가운데, 보수세가 강한 지역을 찾은 이 후보는 “분열의 정치를 이겨내야 한다”며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권력을 쉽게 유지하기 위해서, 무능하고 불충함을 감추기 위해서 편 가르고 증오하고 혐오하게 하는 이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이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반쪽에 의지해서 서로 싸우게 하는 반(反)통

령이 아니고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답게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반드시 되겠다”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안동 유세 후 취재진과 만나 보수 성향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이 실질적 배후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박스쿨(언급된 보수 성향 단체)의 실제, 활동 내용,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교류 관계를 보면 국민의힘이 무관하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오후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도 “이념이나 가치보

다 중요한 건 먹고사는 문제다.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어떤가”라며 “유용하면 쓰고, 유용하지 않으면 버린다. 좌파·우파 그런 거 안 한다. 우리는 실력파”라며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경기 수원·성남·구리·남양주·의정부, 서울 강남·은평·서대문·마포·강서에서 김문수 후보가 직접 유세하는 강행군 일정을 짰다.

김 후보는 전날(5월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광훈 목사 측을 통해 밝힌 김 후보 지지 선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2·3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수원 광교 유세

“노후보장·스테이블 코인” vs “연금개혁·가상자산 육성”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선후보 금융권 공약

이재명, 학자금대출·주거비 지원
김문수, 청년 정책상품 가입 완화
이준석, 신·구 연금 분리 공약
청년 주담대 ‘잠시 멈춤대출’ 약속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의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삼파전’ 양상 속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일제히 연금, 청년 금융, 가상자산 등 금융권의 주요 쟁점을 주요 공약에 포함했다.

◆ 이재명, 노후 보장 확대·청년 취업 지원

이재명 후보는 노후 보장 확대를 위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청년 확대와 기초연금(노령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의 단계적 축소를 공약했다. 현행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각 20%를 삭감해 지급하는데, 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 소득 발생과 관계없는 국민연금 지급도 약속했다.

청년금융공약으로는 학자금 대출이자 완화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지원을 제시했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대학 졸업 및 취업 시까지 지자체가 대신 부담하도록 하고, 무주택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금 및 세액 공제액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인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미래적금)’의 재출시도 공약했다.

가상자산 정책으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 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가

속도를 내는 만큼, 통화 주권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또한 가상자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금융기관, 기존 거래소가 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한 ‘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의 신설도 논의한다. 상장·공시 기준 개편을 통한 이용자 보호 확대도 약속했다.

◆ 김문수, 연금개혁 지속·청년 정책상품 확대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근로 소득과 관계없는 국민연금 지급을 약속하는 한편, 20·30세대를 중심으로 ‘2차 연금개혁’을 단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 세대를 주축으로 연금 개혁 논의에 즉각 진입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구조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청년 금융공약으로는 현 정부의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 중기 재직 청년 지원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연령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혼·출산 시 각 3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 및 청년 전용 주택의 공급도 약속했다.

가상자산 공약은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둘렀다. 기존 1거래소-1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벤처기업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기업·기관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및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도 공약했다.

◆ 이준석, 신·구 연금 분리

이준석 후보는 고령화·저출생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신·구 연금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미래세대의 납입액을 통해 수익률

을 약속하는 기존 국민연금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미래세대는 자신이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에 새롭게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울러 기존 연금의 미적립 부채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국고 투입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금융공약으로는 고금리 장기화로 주담대 상환에 부담을 겪는 청년 가구에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잠시면 출대출’의 출시를 약속했다. 기본 유예기간은 3년이며,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유예를 제공한다. 아울러 자산 불안정성이 높은 고졸 청년에 연 1%대의 금리에 최대 5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는 ‘든출발자금’의 출시도 약속했다.

가상자산 공약으로는 법인세 감면·국유지 장기 임대 등 혼수 부담을 줄여주는 ‘가상자산 특구’의 설치를 약속했다. 아울러 P2E(Pay to Earn·돈을 버는 게임) 근거법 마련, 파생상품 규제 축소 등 시장 다양성 확대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민생·경제 어디에… 선거 막판 네거티브 공방 격화

여조 선두 이재명 향한 집중 공세
민주당, ‘리박스쿨’ 댓글조작 보도

6·3 조기 대선이 막판으로 치닫을수록 서로 헐뜯는 공방으로 격화되며 유권자들에게 민생과 경제에 대한 기대보단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정치권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세 차례의 21대 대선 토론이 마무리되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돌입하면서 정당은 상대를 향한 네거티브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중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 발표된 지지율 조사에서 대부분 선두를 달리고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집중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토론 중 논란이 됐던 커피 원가 120원, ‘호텔 경제학’에 대한 공격을 넘어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한 비판을 집중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5월 27일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

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로 추정되는 네 티즌이 작성한 성희롱성 댓글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바 있어 논란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 댓글에 대해 상습 도박 논란까지 띠우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또한 국민의힘은 진보 진영 대표 녹색인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난영 여사에 대해 했던 발언을 여성·노동자 비하라고 지적하며 전선을 넓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조직적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는 비방했다는 논란에 공세를 취했다.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1일 오전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극우 여론조작부대가 ‘자손군’이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고, 조직에 참여한 청년들을 가짜 자격증으로 초등 늘봄학교 강사로 투입시켜 우리 아이들에게 극우 세뇌교육을 해왔다는 충격적인 보도

가 나왔다”고 우려했다.

윤 총괄본부장 “불법으로 선거결과를 조작하려는 이번 사건을 우리는 선거부정 댓글내란 사건이라고 부른다”며 “2012년 MB정부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과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사태의 종합판이라 할 만한 심각하고 충격적인 국현문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보수 성향 단체와 연관성을 부인하며 민주당이 네거티브 공세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실장은 “리박스쿨은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당 선대본 그 누구와도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